

ISSUE BRIEF 2018

vol.8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평생학습 × 전망

CONTENTS

- 1 **키워드와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이슈**
현영섭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2 **통일을 바라보는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 - 평생교육학적 쟁점**
이병준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3 **인구변화와 평생교육의 방향 - 50+세대를 중심으로**
양안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장

키워드와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 이슈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변화를 읽기 위한 노력은 평생교육의 실천을 미리 준비하고 선도하는 성과와 관련된다. 변화를 읽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통계자료나 소셜데이터(social data)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통계자료나 소셜데이터를 이요하는 것은 대규모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하고 예측하는 동향과 변화의 범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글에서는 통계자료와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현재와 미래 특징을 보여주는데 있었다. 이 글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및 공공자료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거나 그대로 활용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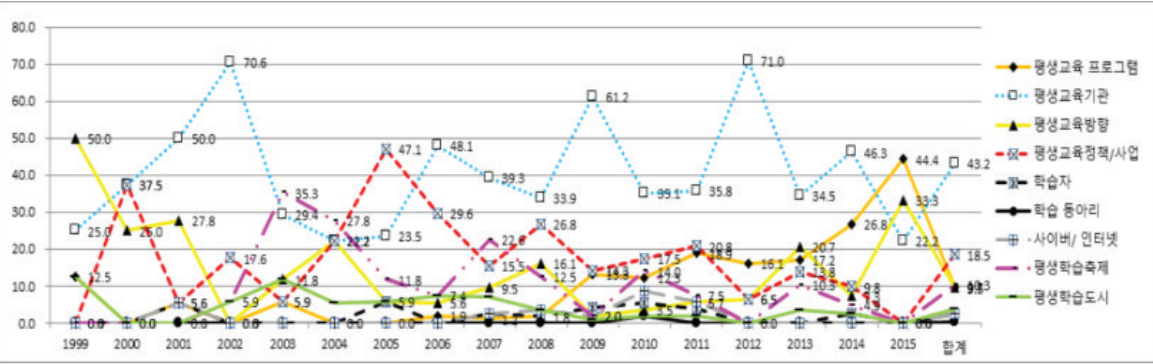
I 국내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분석으로 보는 평생교육 이슈

국내 연구 중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평생교육 이슈를 분석한 연구로는 현영섭(2015), 홍영란 외(2016), 권대봉 외(2016), 권대봉, 현영섭, 정은정(2016) 등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선 연구들을 포함하여 국내의 평생교육 관련 빅데이터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에 대하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현영섭(2015)의 연구는 국내 4대 일간지에서 평생교육 관련 기사를 수집·분석하여 키워드의 동향 및 사회연결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게재기사 중 평생교육, 학습자, 평생학습 등을 포함한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632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을 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신문 기사를 내용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기사가 1999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1999년에는 평생교육방향, 2003년에는 평생학습축제, 2004년에는 평생학습축제, 2005년에는 평생교육정책/사업, 2015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신문기사가 전체 미디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미디어로 재생산되고 방송사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대체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것은 국내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평생교육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에 대한 뉴스를 생산하는 주요 주체라는 것이었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 선택 등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경우는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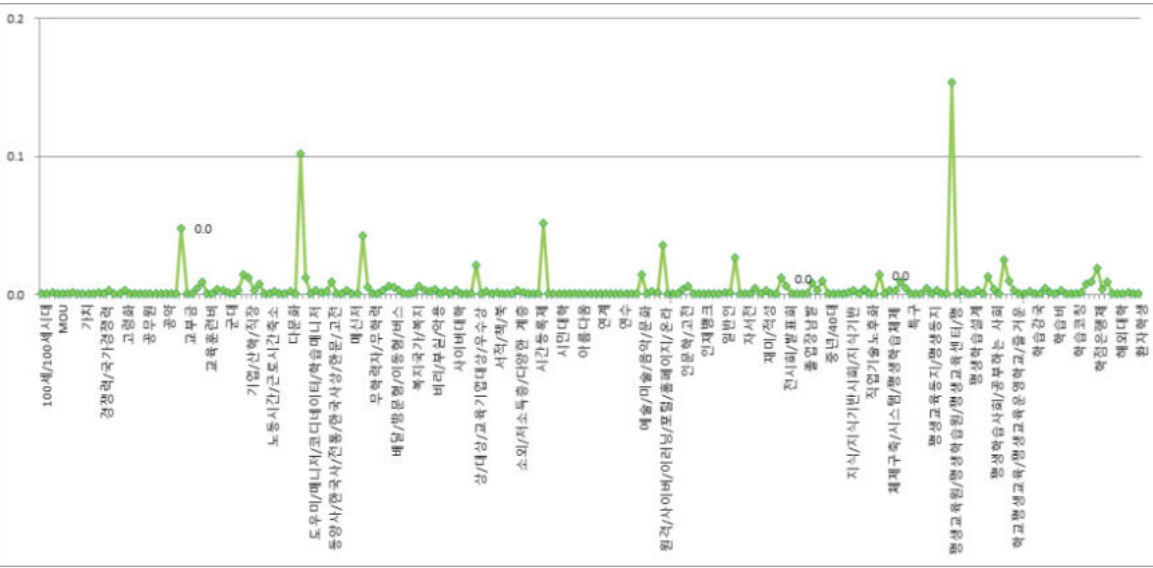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주제별 신문기사 비율(%)



출처: 현영섭(2016)의 자료 재분석.

히 적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신문기사에서 나타나는 평생교육의 모습은 공급자 중심 또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 또는 특징을 갖는다. 더욱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기관만큼 자주 등장하는 기사의 주제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기사에 준하는 것이었다.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이외에 평생교육방향, 평생교육정책, 평생학습축제 등에 대한 기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도시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신문기사에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신문기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다.

[그림 2] 주제별 신문기사 비율(%)



출처: 현영섭(2015)의 자료 재분석.

출현 비율이 높은 주제어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으로 누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평생교육공급, 즉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다수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도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평생교육 기사가 다수였다.

다문화는 평생교육 내용 중에 하나였으나 점차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 중에 하나로 등장하였다. 특히 교육부에 의해서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예비학교 등이 운영되던지 원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신문의 주요 내용 중에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교 중심의 접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한 접근을 강조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학교는 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기관과 다문화 이외에 공약, 무학력자/무학력, 시간등록제 등도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였다. 공약이 주제어로 등장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거나 각종 선거에서 등장하는 평생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가 주기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내용에 비해 평생교육을 공약으로서 신문기사에서 다루는 비중이나 분량이 많이 보다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사 중에서 일부 공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찌되었던 평생교육 관련 공약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잘 이행되는지 등에 대한 신문의 관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평생교육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무학력자/무학력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학력보완 기능과 문해교육 기능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주제들이었다. 특히 2000년대부터 문해교육에 대한 실증조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문해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학력이 중요해졌다. 또한 PIAAC과 같은 국제 조사에서 저능력자(low-skilled people)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학력이 고려되면서, 무학력자 또는 무학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 문해능력이나 저능력의 수준은 학력과 관련이 있으나 학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무학력자를 위한 평생교육은 비문해나 저능력으로 치환되기 보다는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보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주제어로 등장한 시간제등록제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의 강좌를 시간제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수강제도이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시간제등록제에서 성인학습자가 강좌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학위로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현영섭, 신은경, 2011). 최근에 와서도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간제등록제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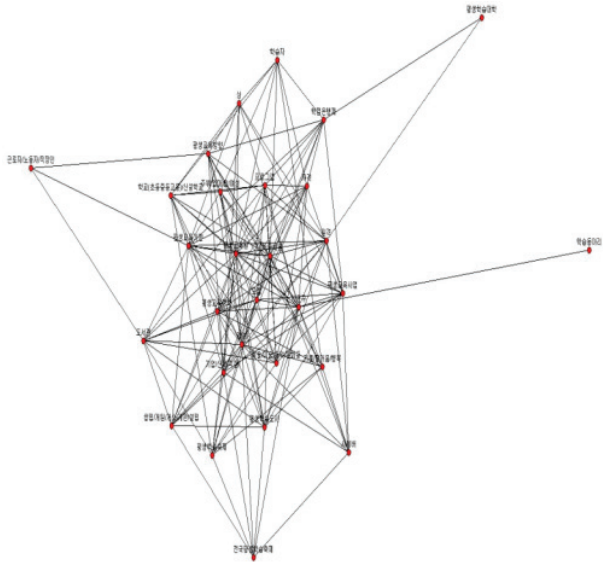
현영섭(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중, 신문기사의 주제어 간의 개념연결망 분석이 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현 빈도 1% 이상의 주제어는 총 19개였다. 여기

에 대분류가 함께 포함된 분석 노드 수는 28개, 링크 수는 169개, 평균 중심성 수치는 0.416, 최대 중심성 수치는 0.786, 최소 중심성 수치는 0.036이었다. 대분류 및 관련어의 중심성 수치만 보면, 평생교육원/평생학습원/센터 등의 평생교육기관 관련어의 중심성 수치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광역, 시군구, 대학/어학원, 원격, 기업/산학/직장, 모집, 자격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지역평생교육, 대학교 및 어학원 등의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이 평생교육의 다른 실천 또는 이를 표현하는 주제어를 이끄는 핵심어이자 동향이였다. 앞에서 출현 빈도와 비교할 때 다문화, 시간제등록의 중심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반면에 대학/어학원, 광역, 시군구 등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서, 평생교육실천의 다양한 영역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주제어들이었다.

1% 이상의 출현비율을 보인 평생교육실천 동향이 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 형태를 갖는지를 파악한 연결 그래프를 살펴보면, 주제가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19개의 관련어가 서로 연결되어 신문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심성이 높았던 평생교육원/센터, 광역, 시군구, 대학/어학원의 연결망을 보면, 연결망에 포함된 대부분의 대분류 또는 주제어와 연결망이 존재하였다. 다만, 근로자/노동자/직장인, 평생학습대학, 학습동아리 등 외곽에 위치한 주제어와의 연결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시군구의 경우만 학습동아리와 연결선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원/센터, 광역, 시군구, 대학/어학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신문기사에서의 이미지를 선도하는 표현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자/노동자/직장인, 평생학습대학, 학습동아리는 중심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평생교육과의 연결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제어로 해석되었다.

[그림 3] 신문기가 주제어간의 개념연결망

출처: 현영섭(2015)의 자료 재분석.



[그림 4] 네티즌 의견 워드클라우드

출처: 홍영란 외(2016), p.263.



그러나 낮은 중심성과 적은 연결선을 갖고 있는 주제어라도 학점은행제, 시군구,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평생교육방향, 원격 등의 관련어와 연결되어 주제어 연결망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시군구,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평생교육방향, 원격 등의 관련어는 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관련어와 중심부에 위치하는 주제어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매개자는 신문기사에서 평생교육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나 인식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슈를 받아들이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최근까지의 평생교육관련 빅데이터 활용 연구 중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홍영란 외(2016)의 연구였다. 빅데이터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주요 SNS의 네티즌 의견, 언론기사. 전문학술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네티즌 의견은 포털사이트 내에 블로그와 커뮤니티(카페) 등이 활성화 되어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검색엔진 유입율과 점유율을 기준으로 선정한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한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트위터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핵심 주제어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홍영란 외, 2016). 언론 기사에는 주요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한 400여종의 언론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핵심 주제어를 기준으로 관련 게재 기사 수집·분석하였다(홍영란 외, 2016). 마지막으로 전문학술자료의 경우에는 RISS, DBPIA, PRISM, 교보 Scholar 등 전문학술 DB를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핵심 주제어를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홍영란 외, 2016).

네티즌 자료는 네이버(Naver), 다음(Daum), 트위터(Twitter)를 통하여 검색하였다. 주로 이 사이트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의 게시글을 모아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네티즌의 게시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제어는 ‘학점은행제’, ‘취득하다’, ‘이수하다’, ‘취득’, ‘자격증’, ‘학점’, ‘평생교육원’, ‘졸업하다’ 등이었다. 그리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게시글의 검증결과 ‘과목’, ‘학습플래너’, ‘이수’, ‘사회복지사’, ‘학사학위’, ‘평생교육사’, ‘독학사’ 등도 네티즌의 주된 관심사로 제시되고 있었다(홍영란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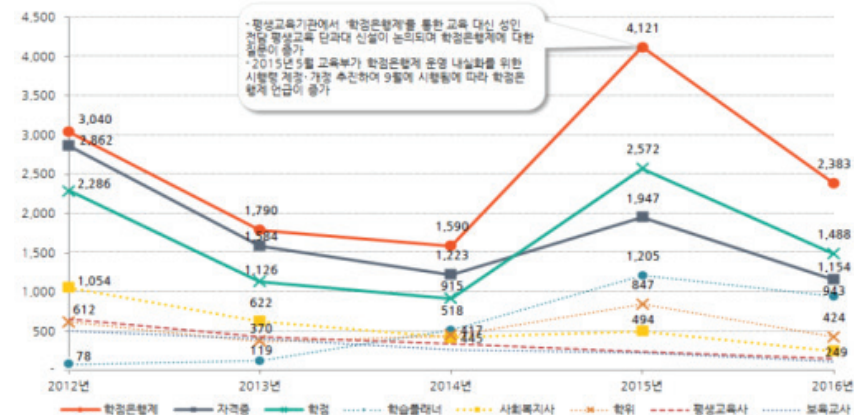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의 자료 전체를 누적한 결과([그림 4] 참조), 학점은행제와 학점, 학위, 자격증이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주제어였다. 그만큼 네티즌의 관점에서는 평생교육의 핵심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이나 학점 및 학위 취득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영란 외(2016)의 연구에서 관련 실제 네티즌의 게시글을 인용한 것을 보더라도 개인학습자나 강사 등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과 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한 상세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게시글의 목적은 학점은행제의 개념이나 취지 등을 알리는 공지성의 글이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함께 제시하였다.

“궁금했던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의 전망,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 (중략) …… 오늘 저와 알아보는 학점은행제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을 지니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일을 하면 1급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흐른 다
음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정년 걱정 없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하략)” (홍영란 외, 2016, p.263에서 재인용).

연도별 네티즌의 게시물 동향을 보면(그림 5 참조), 학점은행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평생교육 확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2015년부터는 그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점에 대한 네티즌 게시물도 증가하여 2015년부터는 2위도 뛰어올랐다.

[그림 5] 연도별 네티즌 의견
주제어 추이

출처: 홍영란 외(2016), p.350.



다음으로 언론 기사에 대한 분석([그림 6] 참조)을 보면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어에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등이 높은 검색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평생학

습도시'와 관련하여 이를 심사/지정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났으며,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 연관 키워드로는 '지원', '선정', '양성' 등으로 나타났다(홍영란 외, 2016).

앞서 분석한 현영섭(2015)의 연구에서 신문기사의 내용에는 공급자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홍영란 외(2016)에서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가 다수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중앙일간지 4개만 분석한 현영섭(2015)의 연구와는 달리 홍영란 외(2016)의 연구는 거의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면서 지역중심의 평생 교육에 초점을 두는 지역신문의 기사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평생교육 재정 지원 등을 공급받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중요한 시책이나 성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2/3 가까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다.

[그림 6] 언론기사
워드클라우드

출처: 홍영란 외(2016), p.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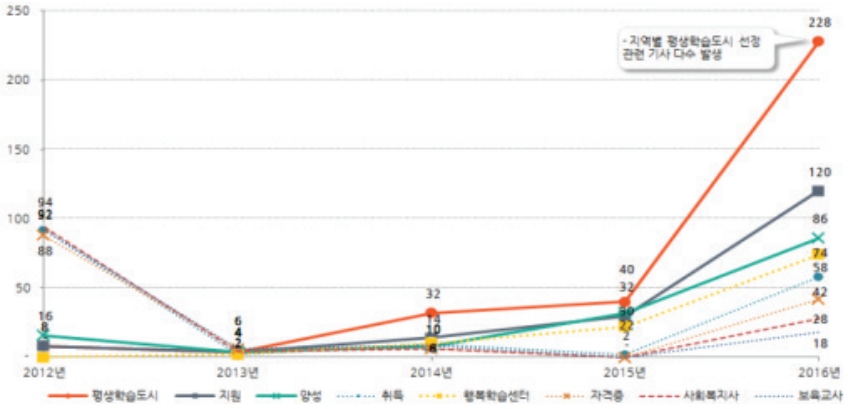


또한 언론 기사에 대한 연도별 비교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자격증(예: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을 위한 ‘취득’, ‘수강’, ‘이수’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2014년 전후로는 노년층의 평생교육, 평생학습 실시에 대한 이슈가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2016년 들어서는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및 학위 취득 교육과 취미생활의 전문적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의 경향을 보였다(홍영란 외, 2016).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분석해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언론 기사는 다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그림 7 참조).

홍영란 외(2016)의 연구에서 전문학술지의 주제에 대한 분석([그림 8] 참조)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학술논문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과 ‘연구’가 주요 주제어로 등장하였다. 이 두 주제어를 포함하여 연구를 하면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을 제외하면, 프로그

[그림 7] 연도별 언론기사 주제어 추이

출처: 홍영란 외(2016), p.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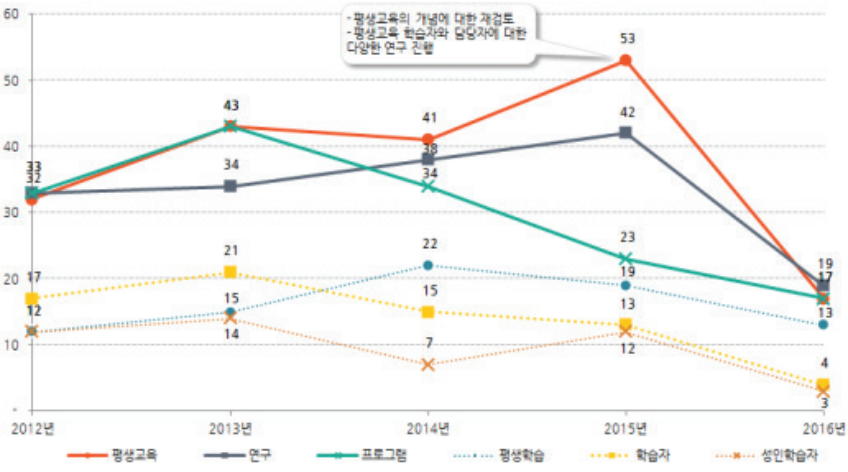


램, 학습자, 검증, 만족도, 인적자원개발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연구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되는 학습자와 프로그램이 주제로 등장한 것으로 이전의 동향 연구들과 유사하였다(장경미, 양세희, 현영섭, 2017).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등도 일부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물 분석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출현빈도는 200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의 하위 영역으로는 ‘이러닝 프로그램’, ‘성인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표현하는 주제어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여가활용, 인문학, 음악활동, 종이조형, 댄스테라피, 박물관 등이었다(홍영란 외, 2016).

[그림 9] 연도별 전문학술자료 주제어 추이

출처: 홍영란 외(2016), p.367.



의 주요 주제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언론에서는 주로 공급자인 평생교육기관이나 교육부 등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소개와 전달의 내용이 다수였다. 이는 공급자 또는 공급 중심의 평생교육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반면에, 네티즌이나 연구물의 분석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이 두어져있다. 아무래도 학습자 자신이 생산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학습자 자체, 학습은행제를 통한 학위와 자격 취득 등이 대표적 주제어였다.

[그림 8] 전문학술자료 워드클라우드

출처: 홍영란 외(2016), p.290.



[그림 9]는 연도별 전문학술자료의 주제어 출현 빈도를 보여주었다. 이 그림에서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 학습자와 담당자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다수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주제나 내용의 빈도를 누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물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도에 상관없이 학습자와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연구

II 다양한 데이터로 보는 평생교육 이슈

1 소외계층과 평생교육

(1) 장애인 규모와 장애 성인의 높은 비중

장애인의 규모와 특성에 보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이해된다.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수는 2017년 2,545,637명이었다(KOSIS, 2018).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는 줄어들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박인섭 외, 2018). 이중 지체장애유형의 경우 1,254,13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49.3%를 차지하였다(KOSI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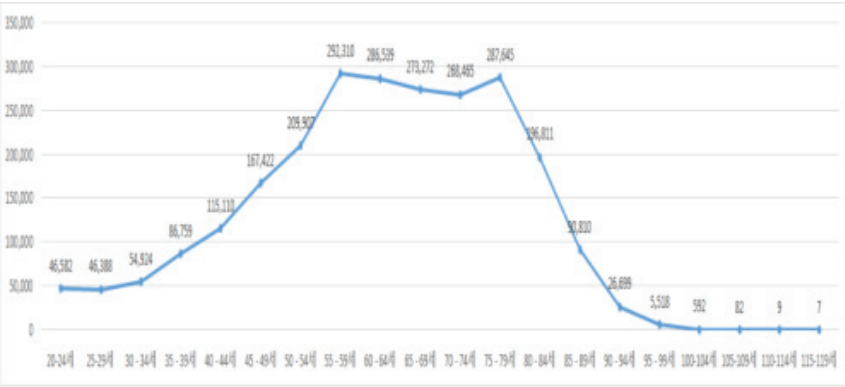
전체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성은 2,455,851명으로 약 96.5%를 차지하였다(KOSIS, 2018). 연령대별 규모를 상세히 보면 30-40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5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은 규모이다. 연령대별로 약 50만 명씩 된다(박인섭 외, 2018).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그림 10] 참조), 50세에서 54세가 20만 명을 넘어서 50대 후반이 2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75세에서 79세까지도 29만 명 정도 되었다. 그리고 다시 80대 전반이 20만 명 정도였다. 따라서 50세부터 80세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 등록장애인의 대다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이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의미하였다(박인섭 외, 2018).

[그림 10]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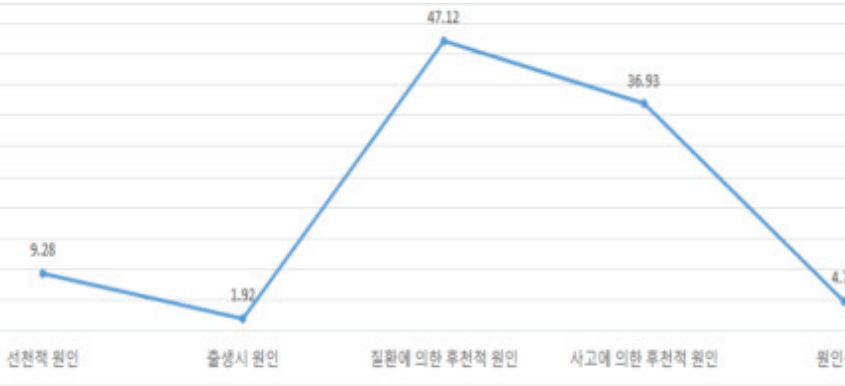
출처: KOSIS(2018)에서 자료 활용.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등록장애인 규모를 분석하면([그림 11] 참조),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약 84.1%였다. 그리고 장애 발생 연령의 평균은 36.9세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따라서 전체 장애원인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장애인성의 규모와도 직결되는 현상이었다.

[그림 11] 장애원인별 등록장애인 규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에서 자료 활용.



후천적 원인 중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 사고나 작업장 사고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런 점에서 장애성인의 대부분이 성인연령 단계에 집중되는 이유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인생의 중반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그림 12] 한국노인인구의 경제활동과 학력 특성

출처: 백흥기(2017), p.2.

[그림 13] 한국노인인구의 고용과 은퇴

출처: 백흥기(2017),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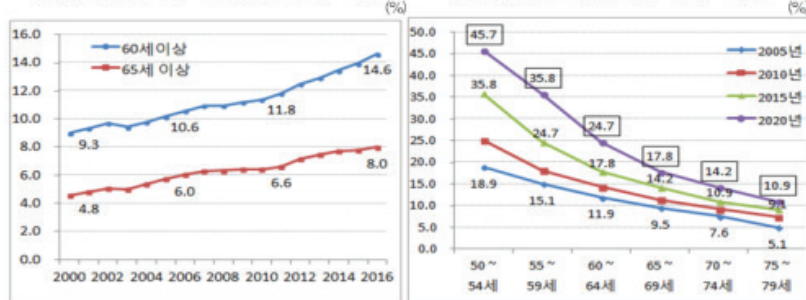
대상으로서 장애성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박인섭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은 겨우 법안이 만들어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국내 10개 정도 마련되는 수준이다. 교육부(2014)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총 3,619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체 등록장애인이 250만 명을 넘는 것, 장애성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현재 평생교육법의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거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질적인 변화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의 특수교육 전문성 부족, 평생교육기관의 특수교육시설 구비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2)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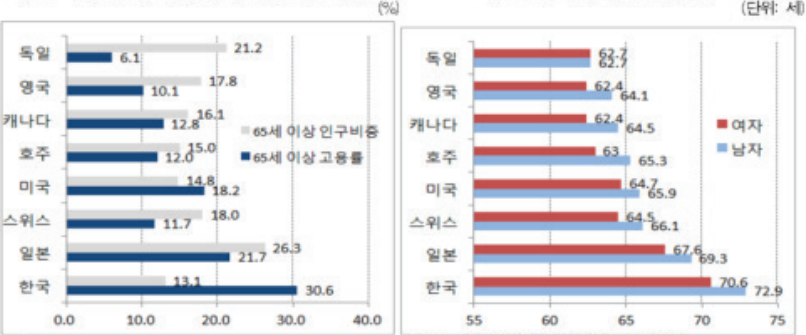
한국은 2018년 고령인구가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인구 비중의 지역간 격차는 커서 이미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도 적지 않다.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은 연령, 즉 나이 드는 것이다.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및 65세 비중 > < 연령대별 초대졸이상 인구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산출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데이터로 산출함.
주1) 전문대학 이상 재학 휴학, 수료, 졸업자 포함
주2) 2020년 데이터는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았음

<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과 고용률 > < 주요국의 실질은퇴연령 >



자료 : OECD(2015), UN(2015).
자료 : OECD(2009-2014년 기준).
주 : 정년 이후 소득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연령.

배제되어야 하고, 특정 연령이 되면 퇴직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은 한국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이다. 경력, 소득, 사회적 지위, 대우, 복지 등에서 연령은 사각지대로 놓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아직까지 고령사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해외 국가들은 진입 전부터 그리고 현재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 중에는 학습을 진작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박인섭 외, 2018).

[그림 12]와 [그림 13]을 보면,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및 65세 이상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고령층에서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실질적 은퇴 연령은 70세를 넘고 있다(백흥기, 2017).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경제활동규모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30.6%로 가장 높다. 그만큼 한국의 노인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낮아서 빈곤율은 48.8%로 고령층의 절반 가량이 상대적 빈곤 상태이다(<표 1> 참조).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그만큼 자신의 빈곤을 직접 느끼는 수준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용의 유형을 보면, 임시직이 전체의 42%이며, 단기고용도 25%를 넘는다. 결국

<표 1> 주요국의 고령층
고용의 질과 빈곤율(단위: %)

	고용률	임시직 비중	단기고용비중	상대적 빈곤율
한국	30.6	41.3	25.4	48.8
미국	18.2	3.9	5.5	20.6
영국	10.1	5.8	3.9	13.5
독일	6.1	3.9	2.8	8.4
프랑스	2.6	9.4	2.7	3.5
이탈리아	3.8	5.9	2.8	9.3
스페인	1.8	10.4	4.2	5.5

주1) 임시직 비중은 55세 이상(2015년)
2) 단기고용은 재직기간 6개월 미만 비중, 55세-64세(2015년)
3) 고용율,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4)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임
출처: 백흥기(2017),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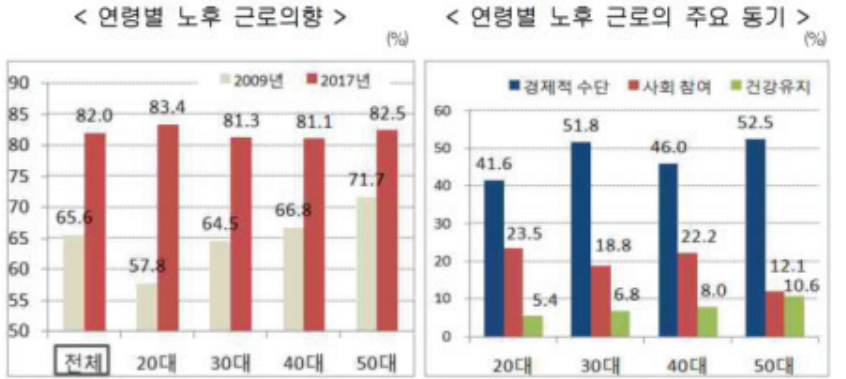
60%를 넘는 노인인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이 된 이후 근로 의향은 2009년보다 2017년 급격하게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82%로 올라갔으며 이는 연령대에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14] 참조). 더불어 노후에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로는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게 손꼽혔으며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단 다음으로는 사회 참여, 건강 유지 등의 순이었다.

한국 고령자는 30% 이상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외로움, 행복, 네트워크와 같은 삶의 질적 측면의 수준도 낮았다(박인섭 외, 2018). 이에 대한 전환적 개념으로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평생학습이 포함되었다(김정영, 한상훈, 2013; 김진한, 2002; 박신영, 어용숙, 2018; 박인섭 외, 2018).

[그림 14] 한국노인인구의
노후근로 의향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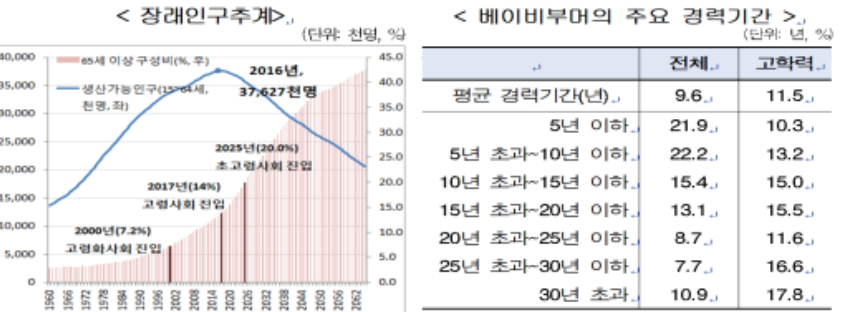
출처: 백흥기(2017), p.15.



최근에 한국의 실버칼라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층 세대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베이비붐세대는 기존 고령층의 고용환경에 진입하기 어려운 차별적 구조와 성향을 갖고 있다(백흥기, 2017). 한국은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2025년에는 고령층 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5] 참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고령자의 고학력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의 16.7%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40대 이하에서는 고학력자가 30% 이상이다. 그만큼 경력기간도 길어서 베이비부머의 평균 경력

[그림 15]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와 베이비부머의 경력 특징

출처: 백흥기(2017), pp.1-2.



기간은 9.6년이 된다. 고학력 베이비부머만 계산하면 11.5년이 된다(백흥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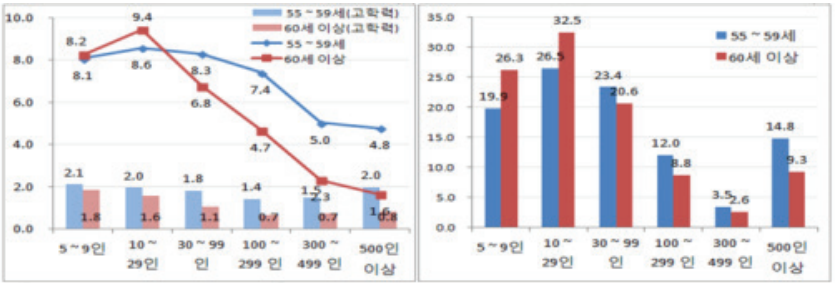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의 경제활동의 특징은 경력기간이나 학력을 넘어서 경제활동상태, 종사하는 기업 특성, 종사하는 직종 등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표 2>를 보면 전체 중·고령자 중 고학력 중·고령자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즉, 고용율이 62.3%, 근로자의 비중도 67.7%로 높았다. 반면에 실업자의 비중도 고학력 중·고령자에서 높게 나타나서, 이중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고학력 중·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도 많이 하지만,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으면서 취업의 애로점도 존재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조직 규모에 따른 고용절벽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표2]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
출처: 백흥기(2017), p.4.

구분	전체 중고령자						고학력 중고령자					
	베이비부머			고령층			베이비부머			고령층		
	인명	%	인명	%	인명	%	인명	%	인명	%	인명	%
취업자	511.2	72.1	344.3	34.3	855.5	53.5	107.9	78.3	27.0	38.6	134.9	62.3
(근로자)	327.0	64.0	177.9	57.9	504.9	59.0	75.7	70.1	15.6	51.7	91.3	67.7
(비근로자)	184.2	36.0	166.3	42.1	350.6	41.0	32.3	29.9	11.4	48.3	43.7	32.3
실업자	13.4	1.9	7.4	1.1	20.8	1.3	2.7	1.9	0.9	0.8	3.6	1.7
비경제활동인구	184.3	26.0	539.3	64.6	723.6	45.2	27.2	19.8	50.9	60.5	78.1	36.1
전 체	708.9	100	891.0	100	1,599.8	100	137.8	100	78.8	100	21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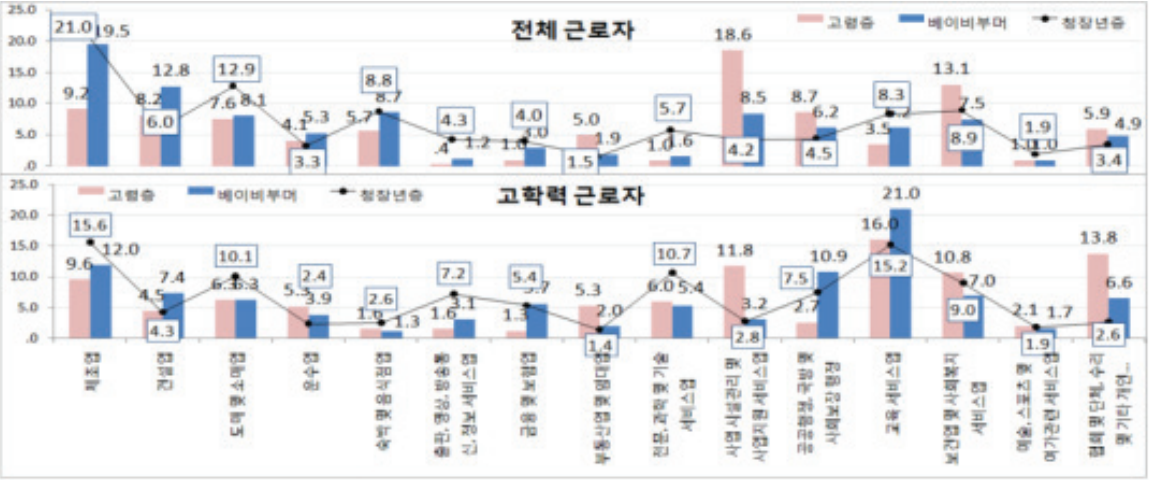
을 보면 조직 규모가 29인 이하인 경우 60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50대보다 많았다. 그러나 30인 이상으로 점차 규모가 커질수록 50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다.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고학력 베이비부머보다 50대의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비중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거꾸로 보면, 고학력이고 젊을수록 더 많이 기업에 종사하지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29인 이하의 소규모 조직으로 몰리게 되고,

[그림 16] 조직 규모별
중고령자의 근로 비중
출처: 백흥기(2017), p.6.



60대 이상은 고용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산업분야별로 선호되는 연령층의 특성은 차별적이었다. [그림 17]을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장년층, 베이비부머, 고령층이 근무하는 산업분야는 차별적이었다. 이는 산업별로 연령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청장년층과 베이비부머 사이의 단절 영역은 건설업으로 베이비부머가 6.8%p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이나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에서도 베이비부머의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의 근로 단절은 제조업(10.3%p),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10.2%p),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5.6%p) 영역에서 나타났다(백흥기, 2017).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의 근로단절은 전문기술산업 영역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간에는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 베이비부머와 고령층 간의 근로절벽은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협회/

[그림 17] 연령특성별 근로자의 산업별 종사 비중



출처: 백흥기(2017), p.8.

단체/기타개인서비스 등으로 절벽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백흥기, 2017).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는 고령자의 지위로 나아가면서 취업절벽과 근로(경력)절벽을 경험하게 되고, 고학력 베이비부머, 이른바 실버칼라의 경우 점차 기존의 고령자층이 점유하던 일자리로의 진출도 어려워져서, 이중고를 경험한다.

[그림 18]을 보면, 일자리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일자리의 매력도 지도를 그린 것이다. 왼쪽의 푸른색이 베이비부머이고 오른쪽 붉은색이 고령층이다. 베이비부머의 경우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직업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이었다.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가장 낮은 매력도를 보였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일자리는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매/소매업이었다. 반면에 최하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이었다.

[그림 18] 실버칼라의
일자리 매력도
출처: 백흥기(2017),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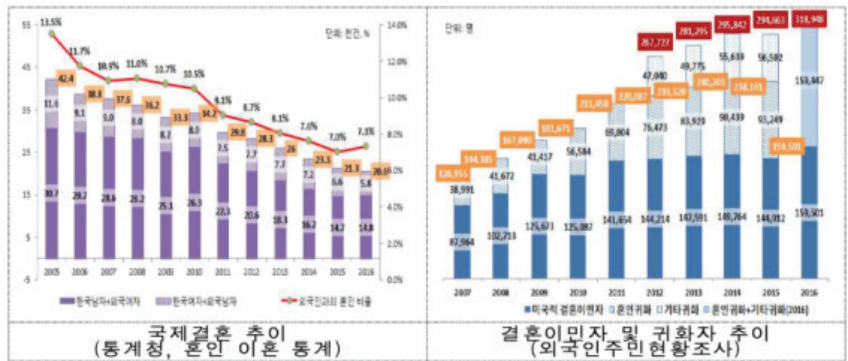
(3) 한국의 다문화특징과 평생교육의 변화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일본의 70년대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70년대에는 경제생산인구의 필요로 인하여 해외에서 노동자 중심의 이주가 증가되었다. 다만 일본은 식민지 강제 국가로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를 받는 것을 꺼려했으며,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다수의 주변국 이주민이 일본에 살고 있었다. 이에 70년대에는 일본이 남아메리카 대륙 출신의 이민자를 많이 받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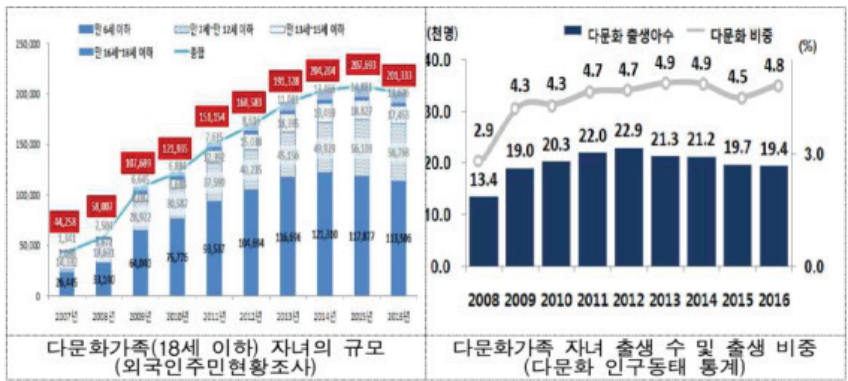
한국은 다문화배경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다문화 수용성이 계속해서 낮아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만큼 다문화배경 이주민의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이해 및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 또는 태도로서 한국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인식 지체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배경 인구는 200만 명을 훨씬 넘어서도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우 다문화배경 인구 비율은 더욱 높고, 피부로 체감하는 다문화사회의 변화는 더 크다(박인섭 외, 2018). [그림 19]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추이가 하락하고, 결혼이민자가 정체되지만, 혼인귀화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혼인귀화자는 혼인을 하고 나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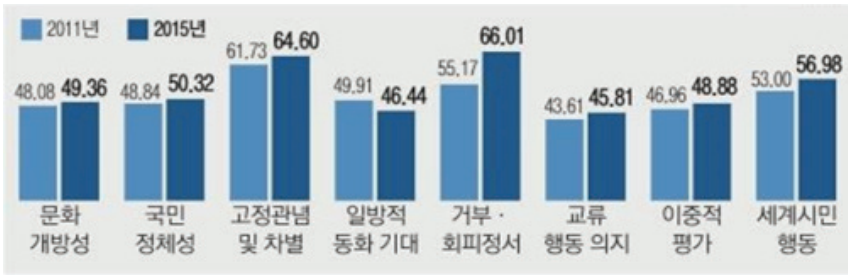
[그림 19] 국제결혼 및 이민자 추이
출처: 여성가족부(2018a), p.5.



[그림 20]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출생
출처: 여성가족부(2018a),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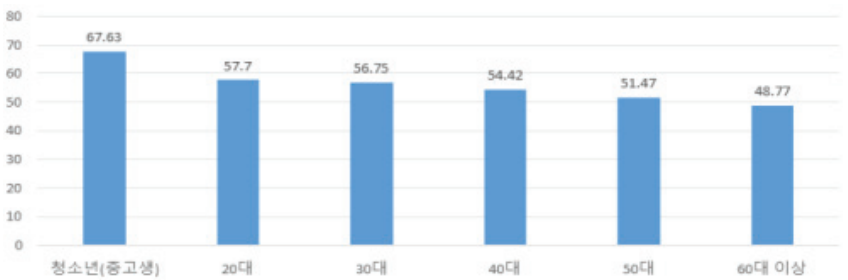


[그림 21] 2011년, 2015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출처: 최훈진(2016).



더 나아가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낮아졌으며, 청소년층과 60대 이상은 약 19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다문화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전통적 사고관에 따라 다문화배경 이주민이나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의 경우에도 평균이 68점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림 21] 2015년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출처: 안상수 외(2015)에서 자료 활용.



다문화수용성과 같은 비다문화배경 한국인이 인식하는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은 실제로 다문화배경 한국인이나 이주민의 사회 적응이나 삶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차별적 인식과 배경에 의해서 사회적 고립과 적응 곤란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실제 소득의 차별, 삶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2년에 비하여 더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월 100-200만원 미만의 가정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다문화가정의 30.9%를 차지하였다. 한 달에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는 전체의 74.3%였다. 그리고 월 가구 소득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정은 2012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였다(안상수 외, 2015). 다문화가정의 소득 양극화는 일부는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적지 않은 가정에서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을 꾸려서 초기의 소득이 낮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지 2018년 개인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월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언어문제(34.0%), 자녀 양육 및 교육(23.2%), 문화 차이(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5). 소득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이나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언어적 소통 문제였다. 한국에서 수년을 거주하여도 충분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초기 한국어 교육 이후에는 개인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배경 이주자 중 노동이주민의 경우는 한글을 배우기보다 일터에 먼저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도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거나 농·수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교육에 전념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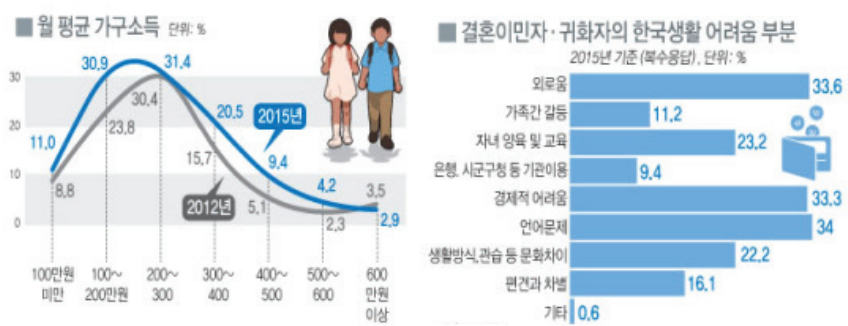
한국의 다문화배경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연도별 증가 규모는 주춤한 상태이지만,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한국의 등록장애인 규모(약 250만 명)와도 유사한 수준이 되고 있다. 다문화배경 인구의 증가와 소득이나 차별의 지속은 다양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배경 인구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의 예산이 늘어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거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는데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중심의 다문화정책을 운영할 뿐 성인학습자 그리고 가족 단위로 다문화배경 이주민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4) 문해능력의 수준과 새로운 접근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하나였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 문해율이 20-30%대였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입학률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학력을 기준으로 비문해자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거의 100%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여 졸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비문해자는 0.1% 미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2013년 및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사된 전국 문해능력 수준 조사(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허준 외, 2014)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수 백 만 명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표 3>과 [그림 23]을 보면, 2014년 비문해자는 전체의 28.5%이고 2017년에는 22.4%였다. 비문해자는 수준1 수준2, 수준3에 해당된다. 수준1은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수준이고, 수준2와 수준3은 기능문해에서의 한계가 있어서 실생활에서의 문자 활용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2017년 기준으로 비문해자는 약 800만 명이다. 2014년에 비해 2017년 전체 비문해자 비율은 낮아졌지만, 수준1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그림 22] 2015년 다문화가족의 소득과 어려움
출처: 반종반(2016).



<표 3> 연도별 성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단위: %)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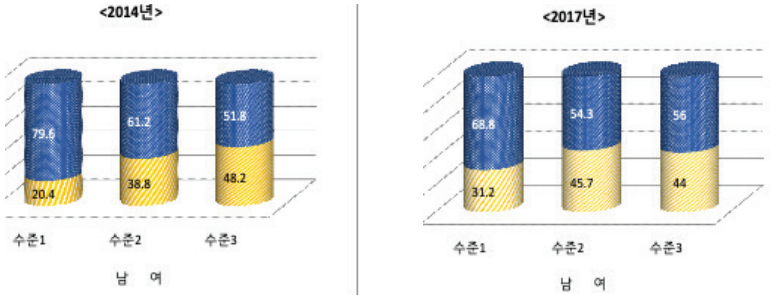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7년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수준5	수준6	수준7	수준8
전체	6.4	6.0	16.2	71.5	7.2	5.1	10.1	77.6
남	20.4	38.8	48.2	53.4	31.2	45.7	44.0	52.6
여	79.6	61.2	51.8	46.6	68.8	54.3	56.0	47.4

성별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문해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준1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남녀 간의 차이가 컸다. 이는 문해능

[그림 23] 연도별 성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5.



력 측정도구가 남성에게 유리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큰 차이였다(현영섭, 신은경, 2018).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문해능력 수준을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주로 50대 이상에 비문해자가 집중되었다. 2017년에도 이런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18세부터 49세까지의 비율도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에서도 비문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은 전체 비문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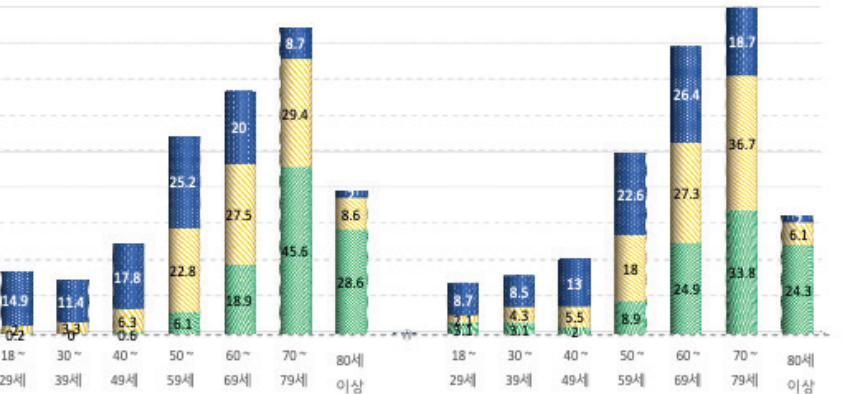
<표 4> 연령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6.

구분	2014년				2017년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수준5	수준6	수준7	수준8
전체	6.4	6.0	16.2	71.5	7.2	5.1	10.1	77.6
18 ~ 29세	0.2	2.0	14.9	24.0	3.1	2.1	8.7	22.9
30 ~ 39세	0.0	3.3	11.4	23.5	3.1	4.3	8.5	21.0
40 ~ 49세	0.6	6.3	17.8	24.2	2.0	5.5	13.0	23.6
50 ~ 59세	6.1	22.8	25.2	18.8	8.9	18.0	22.6	20.3
60 ~ 69세	18.9	27.5	20.0	7.0	24.9	27.3	26.4	8.8
70 ~ 79세	45.6	29.4	8.7	2.3	33.8	36.7	18.7	3.0
80세 이상	28.6	8.6	2.0	0.3	24.3	6.1	2.0	0.4

[그림 23] 연령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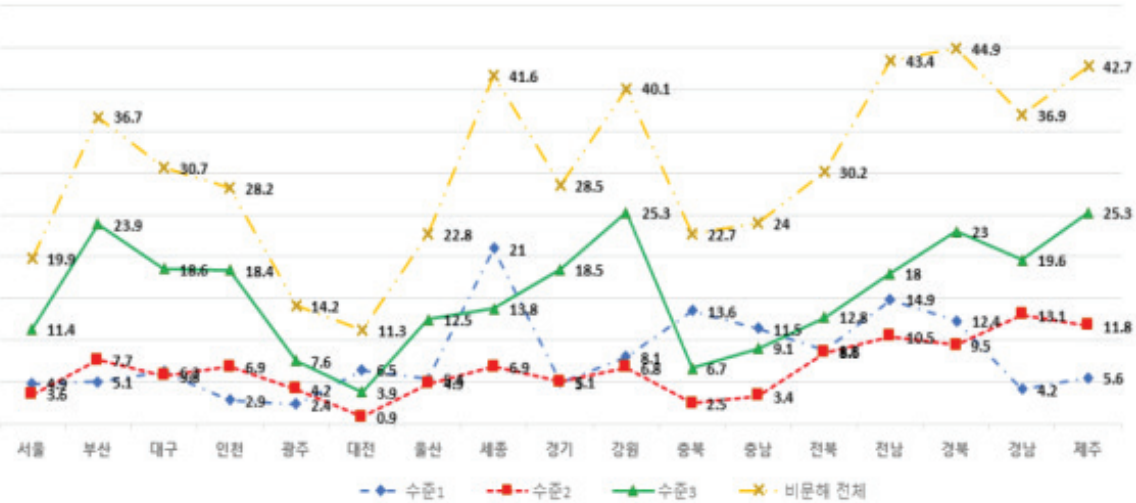


문해능력 수준은 지역별로 차별적이다. 일반적으로 농산어촌의 비문해자 비율이 높고 도시 지역은 낮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문해능력 수준을 고려하고 17개 광역시·도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17개 광역시·도마다 제각각의 문해능력 현황이 나타나고, 또 그에 따라 차별적 문해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4]는 문해능력 수준을 수준1, 2, 3으로 구분하고 이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노란선은 전체 비문해율이다. 즉, 수준1, 2, 3을 합친 값이다. 이 조차도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북의 경우 비문해율이 22.7%로 부산, 대구, 인천, 울산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반드시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비문해율이 도시보다 높은 것만은 아니었다. 더 나아가 문해능력 수준을 구분한 경우에는 수준3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등은 수준1, 2, 3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제주는 수준3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특이하게도 수준 3보다 수준2가 높은 지역도 있었는데, 세종, 충북, 대전이 해당되었다. 이런 광역시·도간 차이는 시·도별로 문해교육 대상의 스펙트럼이 차별적이고 비문해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적 전략, 기초문해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의 범위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5)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자원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향

지역으로 갈수록 도시진 농산어촌이건 평생학습공동체 정책과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공동체로 활용하고 발전하기 위한 평생교육자원의 분포가 더욱 비균질적이다. 지역 평생교육 자원의 비균질성은 지역의 넓이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 참여저해요인으로 지목된다(박인섭 외,

[그림 24] 광역시·도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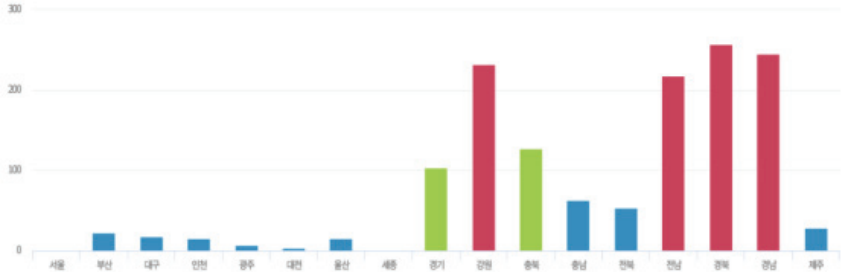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204.

2018). 현재 군단위 지역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을 1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설평생교육기관 역시 군청 소재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현영섭 외, 2018). 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인구 공동화, 빈공간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시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에 제약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폐교는 새로운 평생학습 자원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 인구감소는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의 폐교발생을 가속화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일반교육자원은 평생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박인섭 외, 2018). [그림 25]와 <표 5>를 보면,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중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시·도에 많게는 200개 이상의 폐교가 존재한다. 물론 도지역에 상당수의 폐교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시지역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으로 폐교 발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시·도별 폐교

보유현황(단위: 교)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8).



<표 4> 연령별 문해능력

수준 차이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6.

교육청	폐교 학교수 (단위:교)	매각 (단위:교)	보유폐교(단위:교)				
			활용폐교			미활용 폐교	
			대부(임대)	자체활용	계		계
서울	1	1	-	-	-	-	-
부산	36	13	1	16	17	6	23
대구	35	17	3	8	11	7	18
인천	54	38	4	6	10	6	16
광주	15	8	5	2	7	-	7
대전	8	4	1	1	2	2	4
울산	25	9	3	10	13	3	16
세종	13	12	-	-	-	1	1
경기	161	57	55	35	90	14	104
강원	454	222	175	17	192	40	232
충북	240	113	74	16	90	37	127
충남	261	198	15	16	31	32	63
전북	323	269	10	38	48	6	54
전남	816	598	57	43	100	118	218
경북	714	457	129	59	188	69	257
경남	564	319	125	45	170	75	245
제주	32	4	24	-	24	4	28
계	3,752	2,339	681	312	993	420	1,413

폐교 이외에도 인구감소 등으로 교육영역 이외의 빈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농업기술지원센터, 청소년 관련 시설, 문화관련 시설, 철도 등 공공 시설, 빈집이나 버려진 한옥 등 공간 자원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박인섭 외, 2018; 현영섭 외, 2018). 전국의 빈집 현황을 보면, 2005년 약 72만호, 2010년 약 79만호, 2015년 약 106만호 등 5년 단위로만 보더라도 적게는 7만 호, 많게는 30만 호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이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양소영, 문정민, 2017).

공간 자원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른바 ‘Upcycling’이다. ‘Upcycling’은 재활용과는 달리 ‘재활용’으로 번역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버려진 제품이나 공간 등의 물리적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순한 활용가치의 전환이 아니라 가치를 부가하여 높이고, 디자인이나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오는 등의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아파트의 유휴 공간에 노래방 시설과 학습 시설을 갖춰서 학습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대구 동구)는 평생교육 ‘Upcycling’의 한 예이다(김태환, 2018; 박인섭 외, 2018; 현영섭 외, 2018). 지역 자원을 새로운 자원 활용 방식 적용과 시민활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학습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물리적 자원이나 공간을 평생교육자원으로 새롭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자원 재생과 함께 비균질적인 평생교육 자원을 보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여건 및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박인섭 외, 2018; 현영섭 외, 2018).

[그림 26] Upcycling의 개념

출처: 김태환(2018), p.2.



2)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2016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1월 WEF(World Economic Forum)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2015-2020)에 대한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림 27]을 보면, ‘Google Trend’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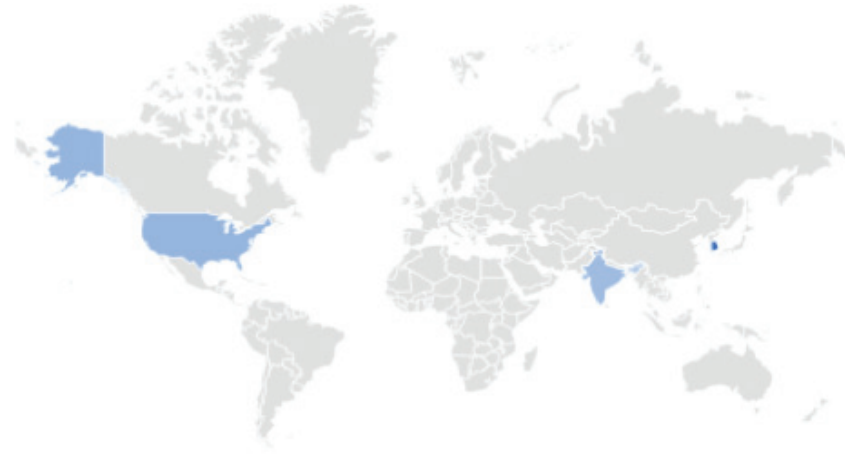
년 초에 검색한 결과,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발표이후 4차 산업혁명 은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관련 빅데이터가 증가하였다.

[그림 27] 4차 산업혁명에 대한 Google Trend 분석결과
출처: Google Trend(2017).



그런데 최근에 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새로운 생산지배권을 갖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림 28]을 보면 2018년 12월의 Google Trend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은 미국, 인도, 한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정 수준 이상으로 게시물이 발견되는 국가만 표시되었고 영어 게시물만 검색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관련 게시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지도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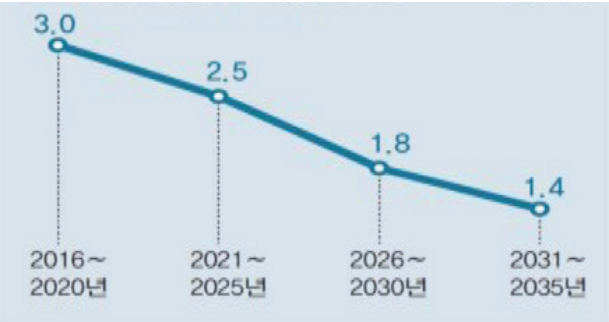
[그림 28] 4차 산업혁명에 대한 Google Trend 지도 분석
출처: Google Trend(2018).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를 새로운 발전 도약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고령화속도로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진입

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장가능인구(15세에서 64세)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을 추이는 계속 하락하여 2021년 2.5%, 2031년 1.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동아일보, 2017).

[그림 29] 한국의 잠재성장을 추이
출처: 동아일보(2015).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정체되면 일자리의 감소나 정체로 함께 발생하기 쉽다. 일자리 감소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회변화이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일자리마저 감소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과연 혁명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의 선언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를 보면(<표 6> 참조), 한국의 전체 순위는 45개국 중 25위로 중간 정도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39개국 중 83위, 혁신수준은 23위, 인프라의 유연성은 20위, 법률시스템은 62위였다. 따라서 노동과 법률은 심각한 수준이고 교육과 인프라는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표 6>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
출처: 현영섭, 신은경(2018), p.196.

구분	전체1)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인프라의 유연성	법률시스템
			교육수준	혁신수준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러시아	31	50	38	68	48	114
터키	39	127	55	60	59	78
인도	41	103	90	42	101	82
브라질	43	122	93	84	64	98

참고문헌

1) 국가 순위로 45국중 5개 항목의 평균 순위를 기준으로 설정(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상위 포진)
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WEF)상의 항목 중 관련 항목에 대한 순위를 대용지표로 사용(139개국 대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를, 교육시스템의 유연성은 고등교육 및 훈련 항목(교육 수준)과 혁신 역량(혁신 수준)에 관한 순위를 사용. 인프라 수준은 기술 준비 수준과 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한 순위의 평균을, 법적보호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사법권의 독립성 등에 대한 순위의 평균을 이용해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은행(2016), p.17.

교육부(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14_2014G013&vw_cd=MT_ZTITLE&list_id=112_11214_300_G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년 11월 12일 검색.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권대봉, 현영섭, 정은정(2016). 성인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빅데이터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16. 6.24-25).

권대봉, 현영섭, 정은정, 우성미(2016).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실천 동향: 2006년-2016년 4대 중앙일간지 게재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2(2), 157-189.

김정영, 한상훈(2013).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4(2), 179-208.

김진한(2002).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안드라고지의 가능성.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1,), 1-16.

김태환(2018). 버려진 공간의 재발견,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 KB 지식 비타민, 18(15), 1-8.

동아일보(2015). 구조개혁 않으면 2026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험. <<http://bizn.donga.com/East/3/all/20150828/73295863/2>>. 2018년 12월 20일 검색.

박신영, 어용숙(2018).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사회적 자본 및 생활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1), 98-108.

박인섭, 권재현, 박종오, 김세화, 오창환, 김진화, 현영섭(2018). 미래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평생학습체제 재구축의 전략과 과제. 서울: 국가교육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반종반(2016). 다문화가족 실태. 연합뉴스 2016년 4월 26일. <<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6/04/26//GYH2016042600060004400.jpg?detail>>. 2018년 11월 15일 검색.

백홍기(2017).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소영, 문정민(2017). 장소적 측면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주학회논문집, 28(5), 101-108.

여성가족부(2018b). 연도별 다문화가족통계.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 2018년 12월 18일 검색.

여성가족부(2018a).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71>. 2018년 12월 18일 검색.

장경미, 양세희, 현영섭(2017). 평생교육 정책연구 동향 분석: 1995년-2016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Andragogy Today, 20(4), 93-127.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8). 폐교현황. <<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2018년 11월 12일 검색.

최훈진(2016). 우리나라 성인 ‘다문화 수용성’ 54점. 서울공공뉴스 2016년 3월 13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4011002>>. 2018년 11월 15일 검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복지패널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F37&vw_cd=MT_ZTITLE&list_id=331_33109_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년 11월 12일 검색.

한국은행(2016).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리뷰, 2016-24, 1-2

허준, 이지혜, 박소연, 길혜지 (2013). 국가 기초 문해력 측정 조사 도구 개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현영섭(2015). 신문기사에 나타난 평생교육실천 동향: 1999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일간지 게재 기사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3), 1-37.

현영섭, 신은경(2011).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저해 요소와 학습저해 해소 방법에 대한 개념 연결망 분석. 한국HRD연구, 6(3), 23-48.

현영섭, 신은경(2018). 성인문해능력 조사 분석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현영섭, 홍영란, 허준, 조순옥(2018).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미래교육실무위원회 평생교육분과 내부보고서.

홍영란, 최정윤, 서영인, 나민주, 장덕호, 현영섭, 김우철, 김현진(2016).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I): 고등·평생교육 영역.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Trend(2017). 4차 산업혁명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q=4%20industrial%20revolution>>. 2017년 2월 10일 검색.

Google Trend(2018). 4차 산업혁명의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q=4%20industrial%20revolution>>. 2018년 12월 20일 검색.

KOSIS (2018). 등록장애인수-시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4&checkFlag=N>. 2018년 11월 12일 검색.

통일을 바라보는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

- 평생교육학적 쟁점 -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¹⁾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일상을 관찰해 보면, 북한에 땅을 살까? 라고 말하는 아주머니들, 통일되면 군대 안가도 되나? 라고 꿈꾸는 청소년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일자리가 생기겠지? 라고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 통일되면 러시아송유관으로 천연가스가 유입되어 가스비가 싸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에서 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생각들을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미래 북한의 변화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분석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일상의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내러티브와는 별도로 전문영역별로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정학적 관점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독립적인 두 체제로 일정기간 이행한다고 할 때 제3세계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북한에 대한 세계 원조기금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속에 통일비용에 대한 계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재)촉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통일이후의 연금제도와 그 운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의 문제들도 이야기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북한과 공존하면서 생겨날 여러 가지 산업적 가치창출에 관심들이 커지면서 이러한 주류적 흐름에 소외되지 않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일견 주류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틀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모든 학문영역들이 통일된 사회에서의 이슈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통일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작업은 모든 일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 통일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거나 미래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마인드 또는 미래리더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차원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과정과 그 이후와 관련된 좀 더 핵심적인 성인교육적 과제와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¹⁾ yibyoungjun@pusan.ac.kr 본 원고는 2018년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II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통일을 보는 방식

1 교육(적) : 영역? 관점?

교육학 학문공동체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교육은 사회 속에서 커다란 역할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을 볼 때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교육학 학문공동체의 입장과는 다른 경제학적, 정치학적 관점으로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장(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기에 사실 교육학의 관심의 독점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는 개별 실천영역의 독자적 관점들의 공생을 의미하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관점의 형성은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육학의 학문적, 이론적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통일문제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교육학적이란 어떠한 관점을 의미하는지를 학문공동체에서 논의하여 검토하는 작업은 기초적인 절차인 듯하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우리나라의 교육담론에서는 합의된 ‘교육(학)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한국의 교육학이 교육학을 응용학문 또는 통합학문으로 인식하기에 교육학은 교육의 현상을 점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관점의 생성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학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과학적 관점이 병존하게 된다. 때문에 교육학적이라는 독자적 관점의 정립에 관심을 가지는 독일의 교육학의 논의는 통일이후의 성인교육의 문제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교육학에는 여러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패러다임인 해석학적 흐름의 전통 속에서 ‘교육적’ 또는 ‘교육학적’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독자적 관점의 이론적 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 본 연구자는 교육(학)적 관점을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관점에서 통일과 통일교육의 문제를 보려고 한다. 통일의 차원에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교육적 행위를 재정리해본다면 ‘북한시민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2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의 문제, 통일시대의 교육의 문제를 ‘북한시민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와 관련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제와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주제영역들이 교육학적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기본입장은 비교육학적 관점들의 식별해내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비교육학적 관점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나는데 이를 독일교육학에서는 ‘규범적 교육학 (Normative Pädagogik)’이라고 지칭하고 있다.²⁾ 규범적 교육학의 관점을 취하면 교육이 목적과 내용을 교육이외의 영역, 즉 종교, 정치 등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교육은 인간존재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아닌 다른 사회적 가치들의 수단으로 변모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은 - J. Dewey의 자유로운 상호교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논의와 연결이 되는 - 사회속의 가치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공존이라는 D. Benner의 논의이다. Benner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실천(praxis)들, 즉 정치적 실천, 경제적 실천, 종교적 실천, 예술적 실천, 교육적 실천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이들 실천들 간에는 위계가 있다고 보는 학문적 입장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Aristotel의 경우에는 여러 실천 들 중 정치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반면 중세의 학자들은 종교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³⁾ Marx같은 학자들은 경제적 실천이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장상호 같은 연구자들은 교육적 가치의 최우선성을 강조한다. Benner가 그의 <일반교육학>에서 주장한 이론적 성과는 이들 실천들 사이에는 등가치성이 존재하기에 상호의존적이어서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이 논의가 왜 중요한가하면 통일과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이 북한사회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적 가치와 교육이외의 가치와의 갈등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그 붕괴된 질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사회이익집단이 있게 마련이며 이들은 성인교육을 매개로 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Benner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학자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실천들 간에는 위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반면 그는 가치들 간의 등가치성을 강조한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적 실천과 다른 실천들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있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주장은 Dewey가 주장한 ‘민주주의’의 원리, 즉 다양한 실천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²⁾ 현재는 독일 교육학담론에서는 배제되어 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³⁾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III 통일 후 직면하게 될 교육적 문제

- 교육적 실천과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의 갈등문제 -

1 정치적 실천 vs 교육적 실천

통일과 관련하여 교육담론에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 되게 될 주제는 정치적 실천과 교육적 실천에 대한 관계의 문제일 것이다. 교육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의 상호관계는 성인교육(평생교육)에 정치(정치성향이 내재된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와 시민교육(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에 관한 사항으로 압축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공공영역은 국가, 광역시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법적으로 기반한 그리고 국가적 관심의 프로젝트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평생교육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장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특정 아젠더들은 거의 공공 평생교육을 통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평생교육을 대단위 강좌로 조직하거나 하는 형태로 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전략을 위해 평생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인교육학적 고려는 부차적인 차원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 고려는 정치적 고려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이 식을 경우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경우들도 생긴다. 소위 지속불가능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을 통일이후의 북한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뭔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적 실천이 교육적 실천과 상호의존하는 문제는 시민교육(정치교육)의 문제이다. 성숙된 시민이 성숙된 정치를 만들어내기에 시민들의 정치를 읽어내고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거점센터들(Bundeszentrale/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현재 독일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성인교육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로 그 지원을 명시화하는 등 예산의 투입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민주주의교육과 시민교육 등 성인교육 활성화가 충분하지 않은 이태리의 경우 끊기 어려운 사회부패의 사실에 묶이면서 경제 또한 위기에 빠지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의 과제가 통일시대의 북한사회에 중요한 이유는 북한시민들이 경험하게 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문화에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겨날 사회적 갈등과 그 비용이 커진다는데 있고 남 북의 사회내부적 통합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데 있다.

2 경제적 실천 vs 교육적 실천

우리사회가 통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는 까닭 중 하나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썩 잘 풀리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도 기반한다. 거시경제적 지표들은 어쩔지 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제적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물가증가속도에 비해 소득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은 월급을 모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사기가 요원할 정도여서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회지도자층들의 암묵적 거래에 의해 개인의 능력개발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가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통일은 심리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직되어 가는 복합적인 문제들의 상당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서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일견 환영할만하다. 최근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event)과 연행(performance)들로 인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선화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전체의 경제적 사고전환이 통일의 모든 과제를 덮는 주도적 관점으로 작용할 경우 교육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한 가장 충실한 수단으로서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공리주의적 가치, 즉 개인과 집단의 능력개발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자본이 이끌어가는 속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속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양쪽의 심한 불균형을 가져올 경우 통일된 사회에서의 북한의 인력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속도감은 북한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속도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속도감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은 통일된 사회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렵다.

경제적 실천이 성공적인 교육적인 실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 후 과거동독지역에서 기업들이 상당기간 고전했던 이유, 즉 단순한 직업훈련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자기주도성과 주체적 판단력들을 기업의 CEO들이 강조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통일된 사회에는 수동적 적응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경제적으로도 절반의 성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의 적절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실천은 자율적이고 성찰적인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사회주의국가에서 만연해있듯이 수동적으로 명령한대로만 과

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북한의 근로자들을 과연 어떤 CEO들이 원할까?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습득해온 일과 노동과 관련된 아비투스(habitus)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까? 이는 통일된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함께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글로벌한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늘어도 불확실한 세계흐름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유럽선진국에서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경제문화 또는 경제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위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인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라는 경제 전략은 통일된 북한사회에서 오히려 더 필요하고 더 잘 작동될 수도 있다. 통일이후 북한의 경제의 제대로 된 작동이 늦으면 늦을수록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젊은 세대의 수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통일이후에 동독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서독지역으로 이탈해왔는가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통일이후에는 북한사회는 -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 일정기간동안 상당한 실업상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주도체제로의 사회 및 경제체제를 통일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잘 작동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가 작동하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상당히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성향과 자본주의가 만나는 형태는 오히려 저항감이 적을 수 있다. 이 또한 상당한 부분의 성인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대다수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이야기, 무한한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지는 자기활동성을 지닌 개인들의 연대에 의해서 겨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과 뒤섞여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책임감과 (COP를 포함한)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희망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깊어져야 할 사회적 또는 복지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며 이러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도 인재개발은 단순한 수동적 인간을 양성해내는 직업훈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종교적 실천 vs 교육적 실천

이미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에 큰 관심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학자들에게도 빈번히 감지되어 왔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통일교육은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교의 수단이다. 기독교의 경우 이미 북한선교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에 해당되었고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선교사들인 점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볼 때에도 서독지역의 많은 종교단체와 조직들이 통일이후에도 동독지역에 그 조직과 가치를 확산하는데 성인교육을 활용한 바 있다. 이들은 성인교육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로는 선교활동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의 영역, 종교영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성인교육을 활용하겠다는데 왜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민간에서의 활동은 그 자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공적자금을 민간이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의 확장이라는 선교활동의 의미를 포함한 성인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종교로부터 교육이 자율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로부터 교육이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그 역사가 더 오래된다.

종교적 실천이 교육적 실천과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지나친 종교사회화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자신의 종교적 삶에 의해 폐쇄될 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성숙한 종교적 실천은 자율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교육을 전제로 한다. 종교 일반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할 때 종교적 실천의 깊이가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종교적 삶을 통해 사회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종교적 근본주의를 통해 타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통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여 성숙된 종교적 삶을 추구하는 실천은 주체적이고 성찰적 시민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인교육은 종교적 가치에 맹목적으로 수단화되어서는 안 되고 종교적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영역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대규모의 선교집단들이 북한사회로 들어가 그들을 '선교적으로 대상화'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추측이 가능하며 그 선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인교육(평생교육)을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인교육은 개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성찰성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빠르게 수행해야 하며 북한시민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인교육에 대한 종교 공동체들의 성숙한 참여를 촉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철저히 감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IV 통일 후 직면하게 될 성인교육학적 핵심 아젠다

1 첫 번째 과제 : 북한 성인학습자를 ‘학습하는 주체’로 인식하기

통일과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성인학습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견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북한의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공산당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한 북한주민으로 복합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두 이미지 모두 북한시민들이 성인교육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보다는 과거의 유산인 공산주의적 정치적 정체성을 제거해야 할 대상 또는 체제 속에 억압받은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 통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 수 밖에 없음 - 통일된 사회는 변화시킬 주체와 변화되어야 할 주체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패배한 사회’의 성인학습자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 현상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적 태도의 -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성인학습자를 결핍된 대상으로 인지하고 성인교육이 기획될 때 출발점이 잘못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곧 그들이 ‘패배자’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을 학습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성인교육의 정책과 실천의 현장 모두에게 적용될 사항들이다.

2 두 번째 과제 : ‘북한 성인들의 자기활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북한사회의 시민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학습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의 과제인 “과연 그렇다면 북한사회의 성인들의 자기활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즉, 이 논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사회주의 체제적 아비투스(abitus)를 체득해 온 북한 시민들에게 자율적 사고와 주체적 판단력, 그리고 자율에 기반한 책임감 등의 태도를 어떻게 습득하게 할 것인가의 교육적 과제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교육학적 의미에서의 주체적인 성인으로 계발하는 것이다. 주체적인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독일통일 초기 상당기간동안 동독지역에서 산업체를 운영한 CEO들이 지적했던 부분 중 핵심적인 하나는 근로자들에게만 연된 수동적 문화였다. 따라서 - 굳이 DeSeCO의 핵심역량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 직업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전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인교육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세 번째 과제 : 북한 성인들이 ‘변화되는 세계와 상호작용’하게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시민들은 개방된 세계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다. 물론 계층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문화를 매체를 통해 접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범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상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방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두 체제가 병존하게 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유입되는 자본주의의 물결을 체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미 1990년경 독일의 통일과 함께 동유럽사회가 대거 변화되면서 우리사회의 좌파지식인들이 상당수도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이동한 바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생겨나는 변형과정은 우리의 상상너머에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생애주기 속에서 특정한 비판적 생애사건(critical life event)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적 지식 (Orientation knowledge)’의 습득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내가 살아 가야 할 세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 속에 그렇다면 나는 이 세계들과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W. von Humboldt가 계몽주의 때 제기한 인간교육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시민들은 그들이 만나는 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과의 관계적 정체성 찾기라는 꽤 오랜 작업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렇게 자기의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앞에 주어진 변화된 세계’를 재현(representation)하여 교육을 통해 잘 드러내는 것이 성인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여기서 재현은 Comenius의 교육방법적 문제의식을 Mollenhauer가 언급한 것으로 성인들을 위해 어떠한 세계를 만나게 해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재현이라고 부른다. 이때의 접근시각은 반드시 적응을 해야만 하는 세계로 인식시켜주는 형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설정의 방식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아직 통일전의 우리사회에서의 성인교육 또한 이런 점에서 충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성인교육은 개인이 변화되는 세계를 살펴보고 성찰하며 선택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잘 적응하게끔 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4 네 번째 과제 : 북한 성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며 시민으로 성장’하게 도와줄 것인가?

국내의 많은 통일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의 교육의 과제로 시민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탈북자들이 귀화한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적응이 힘들며 그들이 북한사회에서 체득한 그들의 아비투스(문화적 자본)가 변화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남한사회를 찾아온 탈북자들조차도 변화된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운 수동적인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을 맞이해야 하는 통일시대의 북한의 시민들에게 시민교육은 바라지 않는 ‘새로운 멘탈의 강제이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대전 후 점령지의 국민들이 연합국이 민주주의 교육의 차원에서 수행한 ‘Reeducation’을 어떻게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과제는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민주주의 교육이자 시민교육이기 이전에 이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 속한다. 점령자들의 교육이데올로기라는 내러티브에 기반한 집단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을 감안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극단적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민주주의로 가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세계적 맥락에서 전개된 사회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기인하지 연합군들이 펼친 Reeducation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그 영향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들의 민주주의학습 또는 시민교육의 거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전체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한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좌파와 우파의 득세가 확산된 곳은 바로 과거 동독지역이다 (물론 그쪽만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초창기에는 점령한 서독에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하며 과거 동독의 공산당에 대한 향수를 지닌 사회적 그룹들이 좌파적 정치집단을 생성해내었다. 그러나 그 후 이와는 별도로 독일의 과거 민족주의에 대한 향수를 지니며 독일적 가치를 추종하는 일군의 집단들이 서독의 집단과의 교감 속에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가는데 이 가운데 극우세력이 매년 그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 과거 동독지역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의 거주가 적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우세력의 확장이 눈에 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세대를 걸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Reeducation이 1960년대야 비로소 학생운동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여러 운동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은 통일 한국의 북한에서의 시민교육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라는 가늠케 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복병과 한국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주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들의 수가 확장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민주주의의 학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주의적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 한편으로는 개인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중심의 문화가 매우 확산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은 시민교육을 위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성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성인교육을 통해서만 가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매체의 발달을 통해 등장한 대안적 매체인 팟캐스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교육을 비형식적으로 무형식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통일시대에는 공공영역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통해서만 비판적 리터러시를 학습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공공영역에서 보이는 성인교육(평생교육)은 행정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어 민주주의와 시민성과 관련된 주제를 공론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듯이 통일이후 북한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성인교육(평생교육)의 방향성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교육속에서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기존매체 중심으로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접하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어진 후에는 팟 캐스트와 같은 SNS기반의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연행적 학습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매개해주기 영향력이 적지 않다.

5 다섯 번째 과제 : 북한지역 ‘전체 시민의 직업능력개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최근 매체를 통해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북한인력들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은 많이 쏟아내고 있다. 뛰어난 IT인력이 있다든지 그들의 성실성과 근면성은 다른 공산주의국가나 제3세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수시로 접하게 된다. 북한시민들의 직업능력들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와 닿으며 그들을 노동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개발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제의 핵심은 매우 다양한 집단들을 위한 서로 다른 능력개발정책이 얼마나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에 걸 맞는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질 집단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북한 내 제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연계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경우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훈련에 기반한 현장전문인력의 육성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한에서 북한쪽으로 이동하여 함께 일하는 움직임도 많아 질 것이다. 문제는 기존 북한체제를 이끌던 리더그룹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와 통일 후 생겨날 실업자들의 문제이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볼 때 리더 그룹들 중 일부는 통일된 북한사회에서 적절한 리더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체제를 이끌던 리더들은 일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적당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다. 통일 후 북한 산업의 구조변화를 통해 생겨날 실업자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및 고령층으로 보이며 젊은 세대들은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⁴⁾ 북한에 머물 계층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타고난 성실성과 생존능력으로 기술학습을 통해 일자리를 갈아 탈 가능성도 높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조직되어 있는 민간자격의 학습시장에 이들이 노출되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가 통일전에 논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여섯 번째 과제 : ‘전 국민의 상호문화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통일시대의 성인교육의 과제 중 여섯 번째는 북한의 시민들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성인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통일시대의 우리사회는 통일을 주도하는 남한시민, 북한시민, 그리고 이주자라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동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만큼이나 남한과 북한 시민들 간에는 정서적이고 문화적 차이가 크게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차이가 일상에서 노정되면 될수록 우리사회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비용은 커져만 간다.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호문화역량에 기반한 성인교육(평생교육)의 국가적 차원의 확산은 너무나 중요하다.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사회가 존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⁴⁾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통일 후에 7%의 북한시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할 것이며 상당수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V 나가는 말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의 성인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⁵⁾ 두 사회체제가 통합이 되었을 경우 북한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한국의 평생교육의 제도와 문화 전체를 진단해보고 검토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땀질식의 보완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맞는 평생교육의 제도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제도와 문화가 건강할수록 통일이후의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성인교육, 우리가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생각보다 정치적, 행정적 영향 하에 많이 놓여져 있어 프로그램의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행정의 영향이 개입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의 재구조화가 절실하다.

둘째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담보할 많은 노력들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과 환경교육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의 미디어들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미디어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려운 자신의 정치노선을 드러내는 형국이어서 미디어의 정글 속에 우리 성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성인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이제 민주주의교육의 문제는 미디어교육과는 분리될 수 없다. 몇 년 전 후쿠시마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에서의 평생교육에서 이를 문제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고 이해하며 갖추어야 할 태도나 기술 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라고 불려도 좋을 듯)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연구자의 불찰로 몇 가지 사례를 숙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다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곧 공공영역의 성인교육(평생교육)이 공공성의 성격 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듯하다. 성인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취향과 이에 따른 행정적 관행이라는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한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⁵⁾ 본 고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과 관련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제외하였음을 밝힘

셋째로는 북한의 성인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개방하고 북한과의 성인교육적 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측 간의 제도와 문화 등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수한 시스템과 문화가 있으면 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함께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세이자 태도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성인교육 담론과 정책과 현장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교육부 관리들은 초국가적 담론들 (OECD, PIAAC, Key Competence 등)에 관심을 가지며 국내 학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가지지 않는다. 담론과 정책에는 큰 간극이 있으며 자생성과 국제화간에도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교육학 또한 정책을 추종하고 뒷받침하는 형태의 보조적, 협조적 역할만을 하고 있어 정책 전반에 대한 담론 기반의 성찰적 논의는 한국의 학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적 작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학문공동체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인 것 같다.

인구변화와 평생교육의 방향

- 50+세대를 중심으로 -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장

I 인구 변화¹⁾

1 인구 추이

- **총인구** | 2017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45만 명으로, 2031년 5,296만 명의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중위연령은 42세로, 이미 40세를 넘어섰고, 2033년에 50세가 넘을 것으로 전망
- **서울시 인구** | 2017년 978만 명으로 총인구의 19.0%에 달하며, 향후 인구 및 총인구 대비 비율이 지속 감소하여 2045년에는 881만 명, 총 인구의 17.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 저출산과 인구이동에 의해 2000년 초반부터 이미 감소 시작
- **50+ 인구 규모** | 2017년 우리나라의 50~64세 인구는 1,158만 명, 전체 인구의 22.5%이며, 2045년에는 1,077만 명, 전체 인구의 21.1%로 전망
 - (서울) 2017년 서울의 50~64세 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22.4%, 2045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21.0%로 전망

<표 1>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단위: 천명, %, 세, 해당인구
100명당 명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5-2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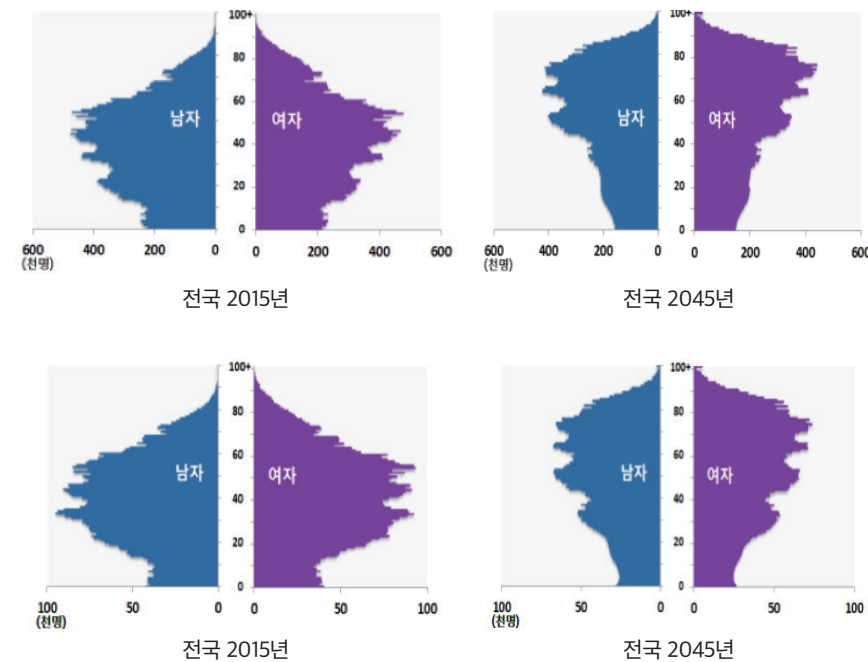
¹⁾ 본 I . 인구변화 단원은 강소량, 정혜윤, 이영민, 유선치, 임승연(2017) 연구의 일부 내용을 인용, 재정리 하였음.

지역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중위연령	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50~64세	65세 이상
전국	2000	47,008	0.84	31.8	21.1	71.7	13.2	7.2
	2005	48,185	0.21	34.8	19.1	71.9	14.7	9.0
	2010	49,554	0.50	37.9	16.1	73.1	18.1	10.8
	2015	51,015	0.53	40.9	13.8	73.4	21.4	12.8
	2017	51,446	0.39	42.0	13.1	73.1	22.5	13.8
	2020	51,974	0.31	43.6	12.6	71.7	23.9	15.6
	2030	52,941	0.07	48.8	11.5	64.0	23.6	24.5
	2040	52,198	-0.32	53.0	10.8	56.4	21.0	32.8
	2045	51,051	-0.52	54.6	10.1	54.3	21.1	35.6
서울	2000	10,078	0.42	31.3	18.6	76.1	13.8	5.3
	2005	10,029	-0.23	34.1	16.6	76.4	15.8	7.0
	2010	10,089	-0.50	37.4	13.9	76.9	19.2	9.2
	2015	9,941	-0.34	40.5	12.0	75.9	21.8	12.2
	2017	9,776	-0.77	41.5	11.3	75.4	22.4	13.3
	2020	9,635	-0.42	42.8	10.9	73.8	23.2	15.4
	2030	9,429	-0.30	47.4	10.3	66.3	22.6	23.5
	2040	9,063	-0.48	51.0	9.8	59.4	20.6	30.8
	2045	8,813	-0.61	52.8	9.2	57.7	21.0	33.1

2 인구 구조

- **인구 고령화** |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000년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2%) → 2017년에 14.02% →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
 - ※ 고령화 사회→고령사회 도달 년수 : 한국 17년, 일본 24년, 영국 46년, 프랑스 115년 소요
- **인구 피라미드 변화**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2015년 30~50대가 가장 넓은 형상에서 2045년에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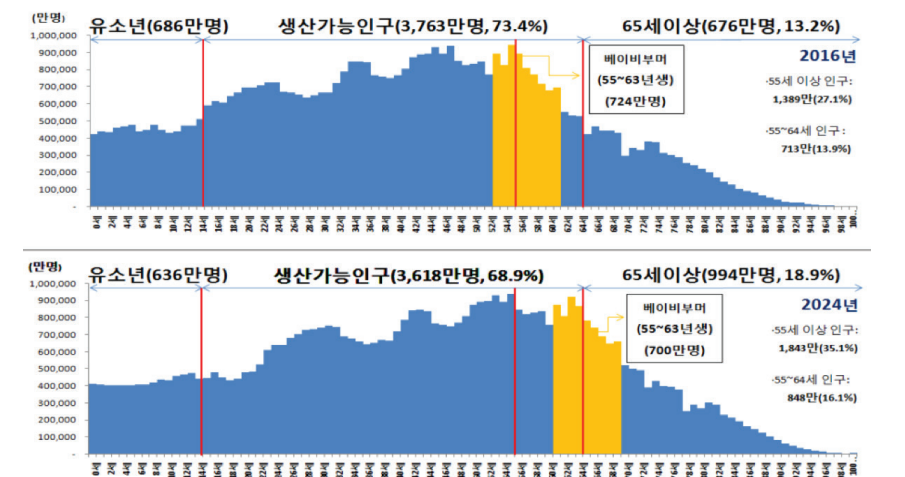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 **연령계층별 규모** | 2045년,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인구 규모는 2017년 규모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소년 인구) 2017년 우리나라 0-14세 인구비율은 13.1%이며, 2030년 11.5%, 2045년 1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생산가능 인구) 2017년 우리나라 15-64세 인구비율은 73.1%이며, 2030년 64.0%, 2045년 54.3%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고령인구)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8%이며, 2030년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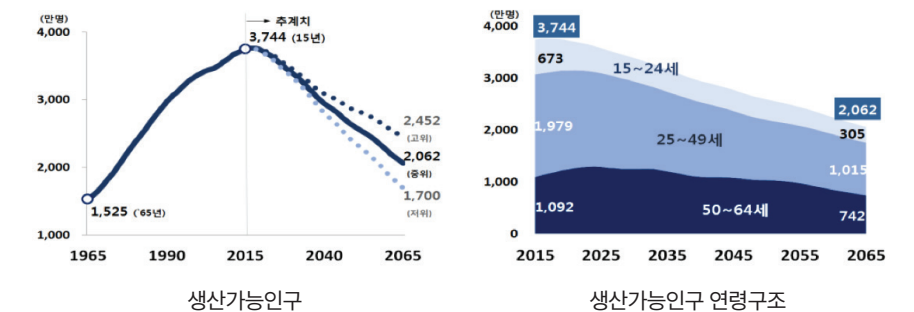
[그림 2] 베이비부머 퇴직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7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안)'

- 2045년 3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 특히,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16년부터 정년연령을 넘기 시작, '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을 초과하는 등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현실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구조의 변화 불가피



-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을 정점으로 '15년 3,744만명에서 '20년 3,727만명, '25년 3,576만명으로 감소 전망
 - 교육,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과 생산성 향상의 요구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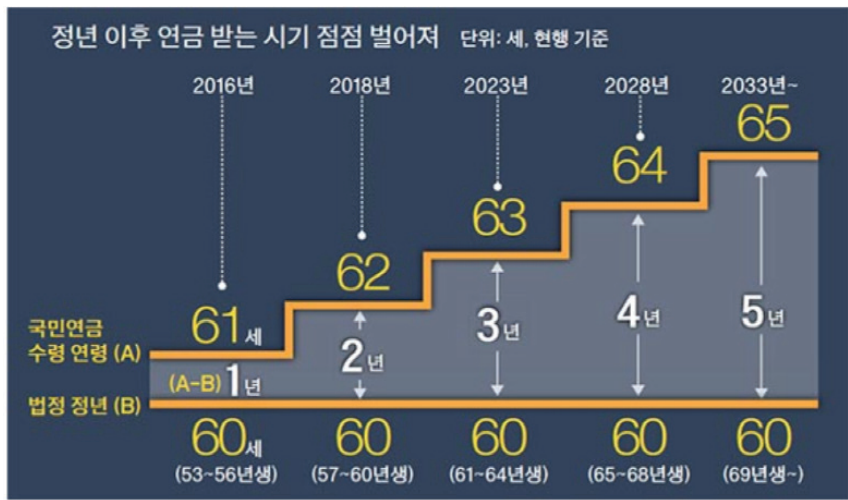
[그림 3] 생산가능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내부자료 (2017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3 인구 고령화와 정년

- 정년과 연금수령시기 |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연금수령연령 간의 차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 간의 차이는 2018년 2년에서 2033년에는 5년까지 벌어짐. 평균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 간의 차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외국의 경우, 정년 폐지 추세이며 법정정년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보다 모두 높음

[그림 4] 정년제 운영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5] 정년제 운영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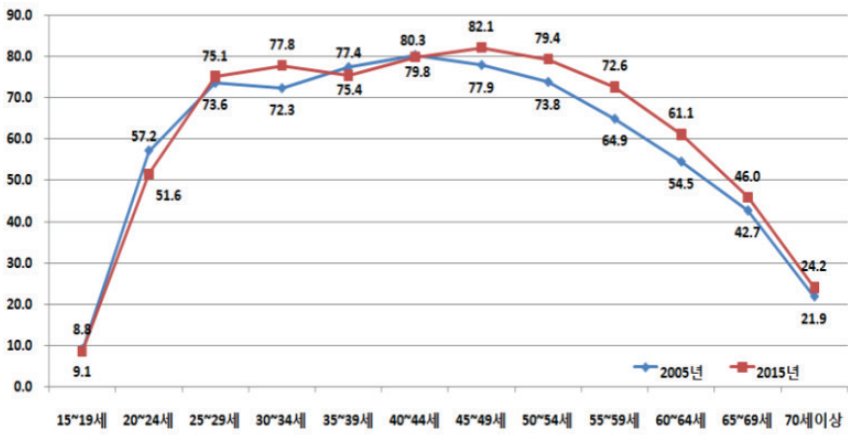
주요 국가의 정년		연금수령 시작 연령
 일본	현재 65세. 정년폐지 추진	65세 (2013년부터)
 독일	65세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정년과 동일
 미국	없음	67세 (60년생 이후)
 프랑스	60세	66세
 영국	정년 폐지	65세

4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의 변화

- 인구 고령화와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인해 중장년층의 고용 비중은 최근 10년간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중장년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 4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그림 6] 연령별 경제활동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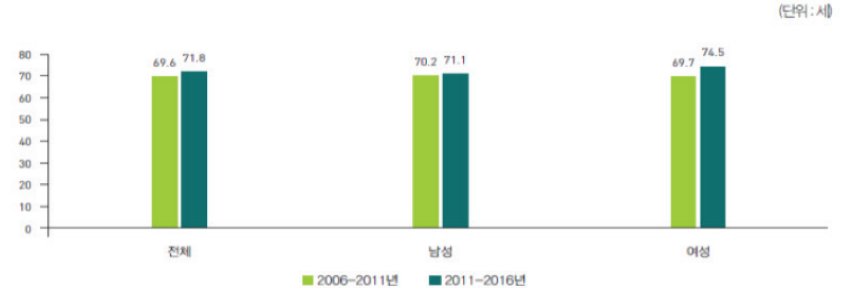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 우리나라 장년층 인력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아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보임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2016년 남성 51.6세, 여성 47.0세로 나타남
 - 반면,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7]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 변화

주: 실질은퇴연령은 5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2006~2011년과 2011~2016년 수치를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2017)



II 평생교육의 방향

1 직업능력향상과정의 높은 참여율

- 불안정한 고용환경, 조기퇴직 등의 현상을 반영하듯,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직업능력 향상과정 개설이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함
 - 2016년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 향상과정이 43,712개(40.6%)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법상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직업능력향상과정이 41,773(50.9%)이 가장 많음

<표 2> 주제구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6 평생교육기관 분석보고서.

구분	계	학력보완	성인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기관	107,667	14,429 (13.4%)	768 (0.7%)	43,712 (40.6%)	21,228 (19.7%)	27,059 (25.1%)	471 (0.4%)
평생교육 법상기관	82,019	13,402 (16.3%)	163 (0.2%)	41,773 (50.9%)	15,133 (18.5%)	11,514 (14.0%)	34 (0.0%)
평생교육 법외기관	25,648	1,027 (4.0%)	605 (2.4%)	1,939 (7.6%)	6,095 (23.8%)	15,545 (60.6%)	437 (1.7%)

- 평생교육 주제구분별 학습자 통계에서도 남, 여 모두 직업능력향상과정이 가장 많음

<표 3> 주제구분별 남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6 평생교육기관 분석보고서.

구분	계	학력보완	성인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	11,754,860	1,552,031 (13.2%)	101,013 (0.9%)	4,006,422 (34.1%)	2,697,434 (22.9%)	3,285,877 (28.0%)	112,083 (1.0%)
남성	5,307,586	565,781 (10.7%)	41,933 (0.8%)	2,036,419 (38.4%)	1,271,256 (24.0%)	1,346,874 (25.4%)	45,323 (0.9%)
여성	6,447,274	986,250 (15.3%)	59,080 (0.9%)	1,970,003 (30.6%)	1,426,178 (22.1%)	1,939,003 (30.1%)	66,760 (1.0%)

2 중장년층 평생교육 참여율

- 인구 고령화, 조기 퇴직, 50~60대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중장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 그러나,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듯하였으나 2016년 다시 감소, 특히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부문 참여율은 17.3%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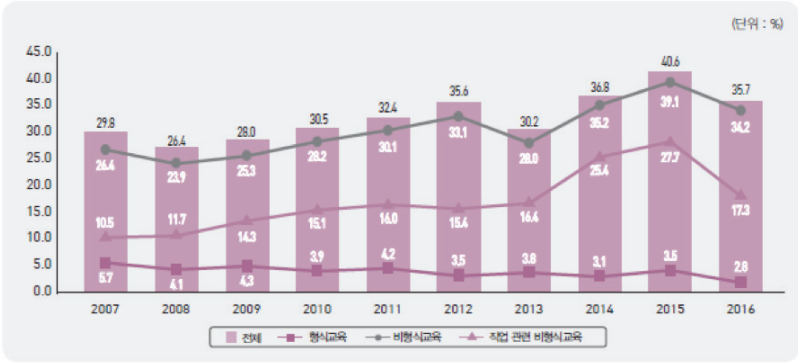
[그림 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16년)

주: 2016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참여자 전체에 대한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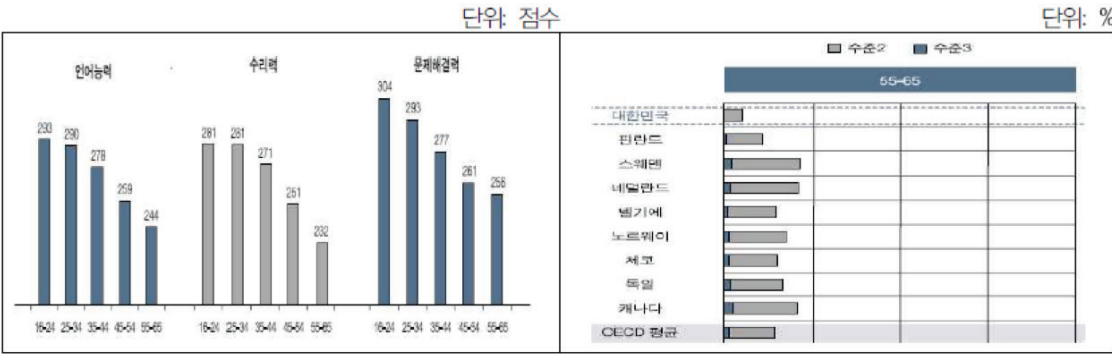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내부자료

(2017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3 중장년층의 역량

- OECD의 국제성인역량(PIAAC)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은 40대 이후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급격히 떨어짐
 - 55~65세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OECD국가 평균과 그 외 조사국가와 비교해볼 때 가장 낮음
 -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청년(16~24세)의 역량은 최상위 수준이나 20대 후반부터 65세 미만까지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은 급속히 퇴화('15년 국제 성인역량(PIAAC)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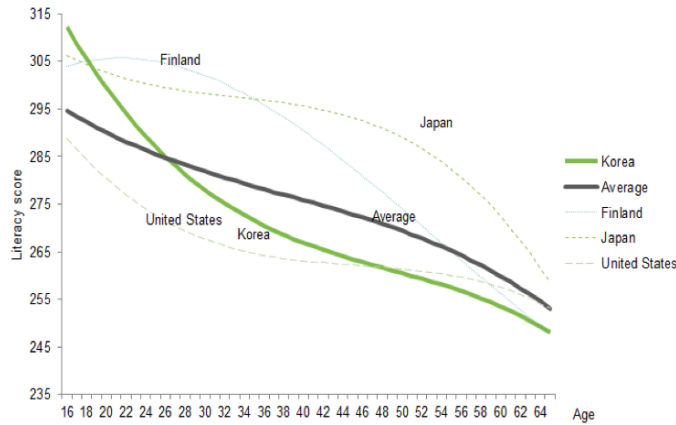
[그림 9] PIAAC 연령별 역량 평균

[그림 10] 50, 60대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능력 수준

자료: 교육부,고용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재인용

[그림 11] OECD 국가들의 연령
별 언어 능력(15년)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내부자료
(2017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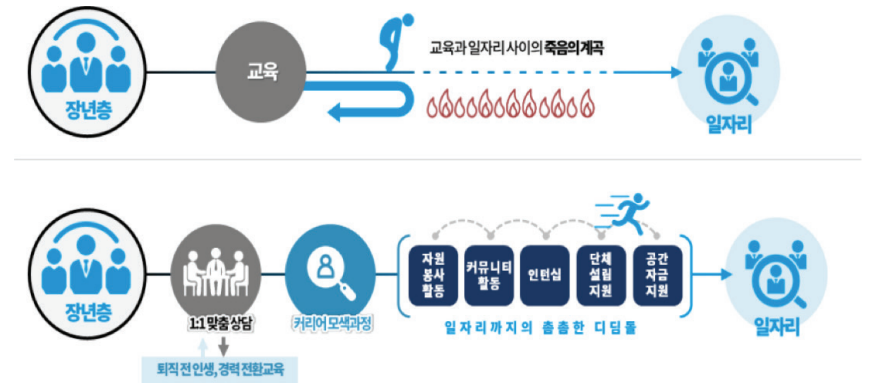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 인구고령화에 따라 생애주기가 길어지고 노동시장 은퇴시기가 늦어지면서 중장년층의 제2, 제3의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고용환경과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감안할 때, 개인, 국가 차원 모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직업능력향상과정에 대한 필요도 높음
 - 국제성인역량(PIAAC)조사 결과에서 보듯, 중장년층의 직업능력향상과정에는 언어, 문제해결력, 협동 등 다양한 사회환경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급속한 기술변화와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평생교육에 있어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과 설계가 요구됨. 먼저 일자리에 대한 범위,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경력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년층이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는 과정을 볼 때, 일자리로 연결되기 전 여러 가지 일/활동에 대한 경험을 거침
 - 일자리(job)의 개념을 기업(기관) 조직 내 일자리를 포함하여 일거리 및 활동 등으로 '일(work)'으로 확장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때 일은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보다 작은 단위의 직무, 직무보다 작은 단위의 작업, 프로젝트 베이스의 일거리, 활동을 포함함

- 교육과 일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설계 : 교육 후의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설,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획
 - 전환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 :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 방법보다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문제해결중심의 교육, 프로젝트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 등의 교육 방법론 활용
 - 교육이후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 교육 후 자원봉사,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활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계약, 교육 후 수료생 간 커뮤니티 결성, 일과 활동을 위한 단체설립, 활동 공간 및 자금 지원, 정부사업 연계 정보 제공 등 교육제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자기주도적 일만들기 교육 :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일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누구나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 교육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전략보다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나가도록 돕는 전략이 보다 유효

[그림 12] 교육과 일자리/일 연
계를 위한 지원 체계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내부자료
(201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소개 자료.



참고문헌

- 강소광, 정혜윤, 이영민, 유선치, 임승연. (2017). 서울시 50+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고용노동부. (2017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안). 내부자료.
- 교육부,고용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6). 평생교육기관 분석보고서.
- 정부관계부처합동. (2017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내부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5-2065』
-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7).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

ISSUE BRIEF 2018

키워드로 보는 2018 평생학습 이슈

vol.8
평생학습 × 전망

ISSUE BRIEF 2018 - vol. 8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발행일 2018년 9월
디자인 그래픽 피엘에프(GRAFIK P.L-F)

주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팩스 02-6730-7166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ISSUE BRIEF 2018

vol.8